

기후 및 감염병 위기에 맞서는 생태복지 체제로의 전환* - 탈식민 사회정책의 접근 -

한 상 진**

1. 문제 제기: 집중호우와 반지하주택, 여성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
2. 개념적 검토 - 생태사회적인 것, 탈식민화와 사회정책의 상호교차성
 - 1) 생태계/사회체계의 관계적 인식
 - 2) 식민주의와 탈식민화
 - 3) 상호교차적 사회정책
3. 복합위기 양상 속 기후 및 감염병 위기의 심화
 - 1) 돌봄, 인종 및 생태를 둘러싼 위기의 복합화
 - 2) 기후변화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
4. 탈식민 사회정책을 통한 생태복지체제로의 전환
 - 1) 탈식민 사회정책과 행정적 제4의 길
 - 2) 생태복지국가에서 생태복지체제로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생태사회적인 것, 탈식민화, 상호교차적 사회정책 등을 개념적으로 검토한 다음, 기후 및 감염병 위기의 특성을 서술한다. 기후위기는 선진국 탄소배출에 의해 후진국 피해가 가중되는 국제적 불평등을 노정하는 반면, 감염병 위기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건강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하다는 상식을 일깨운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 글은 기후 및 감염병

* 이 논문은 2022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sjhahn@ulsan.ac.kr)

위기에 대처하는 탈식민 사회정책의 열개를 일, 가족, 민족, 자연이라는 요소의 상호교차에 의거해 구성한다. 이러한 상호교차적 사회정책은 금융위기, 돌봄의 위기, 인종화된 경제의 위기, 생태 및 기후변화 위기에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제4섹터 주도의 생태사회적 탈식민화 시도이다. 또한 이 때 제4섹터란 제1섹터, 제2섹터, 제3의 섹터에 포괄되는 않는 잔여적 섹터로서의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미래세대, 노인, 비인간 생명체 등 생태사회적 불이익집단을 가리킨다. 이 글은 ‘일을 통한 복지’ 흐름에서 논의되어 온 ‘지구적 제3의 길’과 차별화되는 ‘행성적 제4의 길’이 어떻게 지구, 국가, 지방 등 각각의 스케일에서 제4섹터를 주체로 하여 설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의 생태복지국가라는 민족국가 스케일 담론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다중 스케일에 걸친 생태복지체제로의 전환에 관해 전망하고 있다.

* 주요어: 기후위기, 감염병 위기, 상호교차적 사회정책, 생태복지, 탈식민성

진정한 생태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어야 한다. (중략)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쟁에 포함함으로써 지구의 외침과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동시에 경청해야 한다. (중략) 특히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는 진정한 ‘생태적 채무관계’가 존재한다.¹⁾

하나뿐인 지구에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²⁾

1. 문제 제기: 집중호우와 반지하주택, 여성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

2022년 8월 초 한 시간 141mm의 이례적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살던 여성 발달장애인과 면세점노조 전임자인 여동생 A씨, 그리고 A씨의 딸이 익사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기사를 찾아봐도 이번 재

1)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환경회칙, 2015.

2) 한상진, 『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국문화사, 2018.

해로 희생된 발달장애인의 서사는 찾을 수 없고 장애를 가진 가족을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³⁾ 또 민주노총 백화점 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면세점 노동자들의 소득 저하는 더욱 반지하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다.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⁴⁾ 반지하주택 거주자도 2020년부터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상향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대상자가 정해진 소득 기준 이하인 동시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로 참변을 당한 신림동 일가족은 전월세 난민이 되는 것은 피하고자 침수된 주택을 7년 전에 매입해 살아왔다. 이렇듯 반지하 ‘자가살이’를 택한 가구는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에 무관하게 주거상향 지원제도의 밖으로 밀려나 있다.⁵⁾

한편 2022년 늦겨울부터 초여름까지 한국에서는 산불이 빈발했다. 2019년 말에는 호주, 미국 서부에서 극심한 산불이 발생한 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보고되었다.⁶⁾ 기후 불확실성과 코로나19 대유행은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과소비, 탐욕, 자연/사람에 대한 착취 등에 연결되어 있다.⁷⁾ 고쉬(Gosh)는 기후변화가 “그 자체로 위험이라기보다 기존의 분열을 더욱 심화하고 수많은 갈등을 한층 부추기는 위협승수”라고 지적한다.⁸⁾ 기후위기는 초국적, 국가적, 지방적 스케일에서 신자유주의의 냉혹성과 결합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계급, 인종, 성, 세대 등과 관련한 사회체계 내 차별과 혐

3) 「반지하 장애인 가족 장례식장 앞...촛불이 하나둘 켜졌다」, 『한겨레신문』, 2022.8.12.

4) 『한겨레신문』, 2022.8.11.

5) 「관악구 반지하 가족에게 지상으로 올라올 ‘주거 사다리’는 없었다」, 『한겨레신문』, 2022.8.12.

6)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전염된 곳이 중국의 습윤한 시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서구의 편의적 주장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근본 문제에 대한 부정적하고도 도움이 못되는 평가이다. Ande A. Nesmith et al., *The Intersec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Climate Change, Community, and the Ecology of Life*, Cham: Springer, 2021, p.107.

7) Ibid., p.105.

8) 아미타브 고쉬, *The Great Derangement*, 김홍욱 옮김, 『대혼란의 시대』, 에코리브르, 2021, 189쪽.

오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한 시대의 멍에가 관용정신으로 가벼워져야 할 또다른 시대를 열었다.”⁹⁾ 코로나19는 기후변화를 체현하는 위험이지만, 경쟁적 소비자주의와 개인주의를 초월하는 상호부조, 연대, 친절, 공감 역시 배태해왔다. 이 글은 기후 및 감염병 위기의 배경으로 15세기 말 이래 식민주의에 눈길을 돌림으로써, 서구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분배 특성에 치우쳐 논의되어 온 복지레짐 접근을 넘어 생태사회적인 것(the ecosocial), 탈식민성(decoloniality)¹⁰⁾, 사회정책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등에 바탕을 둔 생태복지체제¹¹⁾(ecowelfare system)로의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이 때 생태복지체제로의 전환을 매개하는 전략은 탈식민 사회정책(decolonial social policy)과 ‘행성적 제4의 길’¹²⁾(planetary fourth way)로 설정한다.

생태복지체제는 생태사회적 배제(ecosocial exclusion)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과 비인간생명체의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생태사회적 웰빙(ecosocial wellbeing)의 경로이다. 차크라바르티(Chakrabarty)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 (중략) 철학자들은 (중략)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이나 인위적 제도가 역지로 떠안긴 불공정, 억압, 불평등, 획일성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심을

9) F. Williams, *Social Policy: A Critical and Intersectional Analysis*, Cambridge: Polity Press, 2021, p.173.

10) 탈식민성은 포스트식민성(postcoloniality)과 혼용될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명백히 의미가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즉, 후자는 식민지 지배 이후의 인종, 민족에 치중하지만, 전자는 인종, 민족 외 성, 연령, 장애, 비인간 생명체와의 관계 등을 동등하게 다루는 차이가 있다. 포스트식민성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복지국가 담론의 일환으로 과거 식민지였던 곳으로부터 이주한 소수민족에 대한 복지 주제로 확립되었다. 반면에 탈식민성은 유럽의 정복 역사로부터의 탈피이며, 식민화, 자본주의, 가부장제 및 근대성에 대한 포괄적 비판에 관계되어 있다. F. Williams, op. cit., p.183 참조.

11) 체제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 필자는 ‘체계화된 제도’라는 말뜻 자체를 중시하는 입장이 다. 이런 관점에서 체제는 경로(path)와 동의어로 취급될 수 있다.

12) ‘지구적’은 인간중심적 표현이지만, ‘행성적’은 비인간 생명체와의 공존을 강조한다. 주운정,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생태환경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한국독일사학회, 『아시아와 유럽의 기후생태문제 연구』,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2 참조. 또 ‘지구’가 민족국가의 결합에 초점을 두는 반면, ‘행성’은 다중 스케일의 공간체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제4의 길’은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의 중도가 아니라, 국가, 시장, 노동을 생태사회적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노선이다.

기울여 왔다.”고 말한다.¹³⁾ 환경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인간만이 역사적 행위 주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로 취급됨에 따라, 비인간의 힘이나 체제는 자유의 쟁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기후 및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복합 위기는 문화 및 상상력의 위기¹⁴⁾, 나아가 ‘사회체제론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박순열은 체제가 몇 개의 체계, 제도, 개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서, 체제변화를 이를 구성하는 체계, 제도, 개념(일부)의 변화나 그 관계들의 변화로 규정한다.¹⁵⁾ 필자는 이 정의에 대체로 동의하나, 인간예외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체계)와 자연(환경)을 이분법적으로 다루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인류세, 자본세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생태계와 사회체제의 착종 현실은 신유물론¹⁶⁾의 문제의식에서 보듯 ‘생태사회적인 것’의 실재성을 강화해 왔다. 따라서 기후 및 감염병 위기에 맞서는 시대적 과제는 사회적 쟁점과 생태적 쟁점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인종, 성, 세대 등과 비인간 생명체를 연계하여 정책적, 실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2장에서 생태사회적인 것, 탈식민화, 상호교차적 사회정책 등을 개념적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돌봄, 인종, 생태 등의 위기와 관련하여 기후 및 감염병 위기의 특성을 서술한다. 4장은 기후 및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는 탈식민 사회정책, 그리고 ‘일을 통한 복지’ 흐름에서 논의되어 온 ‘지구적 제3의 길(global third way)’과 차별화되는 ‘행성적 제4의 길’을 훑아보면서, 생태복지체제로의 전환에 관해 전망해 본다.

13) 아미타브 고쉬, 앞의 책, 159쪽.

14) 위의 책, 19쪽.

15) 박순열, 「기후변화가 아닌 체계의 변화,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자유공동체 1회 공개포럼, 『기후위기 시대, 체제전환의 길을 묻다』, 숲과나눔재단, 2022, 23쪽.

16) 신유물론은 유물론이 인식론으로부터 존재론과 물질의 고유한 능동성에 관한 인식으로의 이동에 기반하는 비인간중심주의적인 실재론을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유물론으로 합의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갬블·조수아 하난·토마스 네일, “What is New Materialism?”, 박준영 옮김, 「신유물론이란 무엇인가?」, 2019(<http://tigersprung.org/?p=2494>, 검색일: 2022.10.31.) 참조.

2. 개념적 검토 - 생태사회적인 것, 탈식민화와 사회정책의 상호교차성

1) 생태계/사회체계의 관계적 인식

1930년대 이후 도시사회학의 시카고학파로 알려진 인간생태학 모델은 도시라는 사회체계가 침입-경쟁-지배-계승이라는 생태계 논리와 비슷하게 작동함을 발견했다. 또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생태체계이론은 위의 문제의식을 사회체계론과 결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때 해당 개인과 그(녀)의 사회환경(가족, 친구, 이웃 등)에 대한 이중적 초점을 유지하도록 강조해 왔다. 이 두 가지 접근은 인간예외주의의 근대적 한계를 드러내지만, 실상 자연에 대한 인공적 약탈과정인 도시화를 자연생태계의 약육강식으로 비유한다거나 개인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이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관계 맺음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회체계론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었다.

사회체계론, 인간생태학, 생태체계이론 등은 인간 주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해 도전받았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 또한 전자와 다를 바 없이 인간예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후자는 사람의 생활 세계에 미치는 자연생태계의 영향까지 포괄하는 생태사회적 구성주의(ecosocial constructionism)로 확장될 경우, 자연과 사회 간 상호의존성 증대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접근케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체계 실재론에 기초하여 '생태사회적인 것' 자체를 관념론으로 치부하는 입장은 극단적 사회학주의의 문제점을 지닌다. 사회학주의의 체계변동 개념은 사회체계와 생태계의 관계적 범주인 생태사회적 체계를 부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감염병에 맞서는 체제 전환의 생태적 차원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태사회적인 것에서 '생태적인 것'은 인간에 제한되지 않는 복잡한 종(種)의 역동적 생태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행성 중 하나인 지구 위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생태계이다. 따라서 '생태적인 것'은 진화되고 진화중이며 끝없이 재생산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종으로 구성되고 있다.¹⁷⁾ 또 '사회적인 것'은 스스로와 다른 종이 살고 재생산하며 죽는 기간에

17) 쟁점이 되는 것은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하나의 역사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생명 가능성이 감당하는 실제의 생물리적 장소에서 함께 살고 죽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생물/

영향을 미치는 종 내부, 그리고 종 상호간 생명체의 사회성이다. 인간의 경우 그것은 사회의 (비)공식적 규칙과 함께 사회가 일부를 구성하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다양하게 구조화, 존중, 통제, 폄하, 도전하는 거버넌스와 관념 등이다.¹⁸⁾

기후변화나 인수공통 감염병의 대유행은 생태계, 사회체계 간 실재적 관계성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생태계, 사회체계의 상호연계는 기후, 건강, 도시 농업, 숲 가꾸기,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 등에서 뚜렷이 발견된다. 나아가 젠더, 인종, 세대, 장애 등을 둘러싼 차별과 배제 역시 자연의 식민화와 같은 흐름에 있는 생태사회적 문제로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 사회, 경제 간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세 접근인 세 개의 기동 모델, 중첩된 원 모델, 내포된 영역 모델을 놓고 해석¹⁹⁾한다면, ‘생태사회적인 것’은 환경, 사회, 경제 등을 별개로 취급하지 않고 그 중첩성의 확장을 통해 사회체계를 생태계에 내포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질병 분포의 생태사회적 이론과 관련하여 생태사회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없는 접근은 다음과 같다.²⁰⁾ 첫째 모델, 프레임워크 등 인과관계만 추론하여 패턴 발견, 유형화에 그치는 경우이다. 둘째 사회적, 생물적, 생태적 과정의 역동성을 종합하지 않으며 생물학적 체현 역시 간과하는 사회이론이다. 셋째 생태학을 무시할 뿐더러 과거의 우생학적 사회생물학을 연상케 하는 생물사회적 접근이다.

비생물적 세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하(되)는 유기체와 종(種)이다. 20만년전 진화했던 호모 사피엔스 이래 인간은 특히 식민주의의 발생 이후 지역적, 행성적 스케일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지방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그것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N. Krieger, *Ecosocial Theory, Embodied Truths, and the People's Health*, Oxford Univ. Press, 2021, p.19.

18) Ibid., p.20.

19) 한상진, 「먹거리 체계의 생태사회적 전환을 향한 먹거리 정의의 접근」, 『에코』 제25권 제1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21, 13-21쪽.

20) N. Krieger, op. cit., pp.23-34.

2) 식민주의와 탈식민화

근대 식민화의 역사는 유럽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을 지리상으로 발견한 15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근대화를 당연시하는 관점에서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화가 어떤 자연적 목적도 없는 장기 지속적 함의를 갖는 진화적 실험으로 보일 수 있다.²¹⁾ 하지만 200년 동안 유럽인과 접촉한 아메리카에서만도 5,500만명의 원주민이 학살되었고, 그 결과 대량의 농업용 토지가 방치되었다. 식민주의의 목표인 사적 이윤은 인간의 노예화, 현금성 작물 생산, 자연자원 채굴 등을 통해 성취된다.²²⁾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화석연료를 식민지에서 채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이 폭넓게 배가되어 왔다.

유럽에서 봉건제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대내적으로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대외적으로 중상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후자가 백인에 의한 기타 인종의 식민화라면, 전자는 대자본에 의한 소규모 경작지 몰수라는 자연의 식민화로 해석된다.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의 집중과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및 억압은 식민주의의 양날이다. 식민화란 사람들이 타인은 물론 생태계와의 핵심적 관계를 무시하는 세계관 및 관행의 확산 과정이기 때문이다.²³⁾ 역사적으로 식민화된 토지는 제국의 권력 확장에 필수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탈취, 점거되어 왔다. 식민주의자는 토지에 대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복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착취될 자원으로 파악한다.

21) 차크라바르티는 서구 중심주의에 의거하여 식민주의를 근대화로 포장하는 관점에 대해 '유럽을 지방화하기'라는 기획으로 근본적 비판을 가한다. 그에 의하면, 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길은 또 하나의 중심을 내세우는 길도, 안티-중심에 함몰되는 허무주의의 길도, 복수의 중심이라는 상대주의의 길도 아닌 탈중심적인 중심을 모색하는 길이다.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Provincializing Europe*, 김택현·안준범 옮김,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린비, 2014, 502-503쪽.

22) 유럽 식민주의의 공격성은 저항에 직면했으나, 백인 식민자들은 선진적 군사역량으로 통제 권력을 장악하는 데 결국 성공했다. 피식민 원주민이 한번 통제를 받게 되면, 지방 자원은 채굴되었고 먹거리 작물은 현금성 작물로 대체되었고 사람과 자연은 착취되었다. 아울러 유럽에 의한 식민화는 전통 공동체, 가족, 문화 및 영성의 파괴를 가져왔다. Ande A. Nesmith et al., op. cit., pp.108-109 참조.

23) Ibid., p.110.

식민주의는 그 정치적 지배가 끝난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폭력과 억압에 의해 생명의 소비 및 가치화를 자극하는 행성적 자본주의 논리로 잔존해 있다. 이러한 신식민주의의 부정적 결과는 원주민이 식민지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높은 빈곤율과 폭력에 노출하게 만든다. 식민주의의 이윤에 대한 탐욕은 대량학살, 강제적 동화, 타인의 비인간화 등으로 피식민지 민중의 공동체 및 정치적 실체를 파괴하고, 생태계 오염과 자원고갈을 가져왔다.²⁴⁾ 식민주의는 사람과 자연 모두를 통제, 조작되는 대상으로 보아, 인간 상호간은 물론 인간과 자연 간 관계를 왜곡시킨다.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는 오랜 기간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다.²⁵⁾ 맑스는 소수만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체계에서 도약하려면 타인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져야 하므로 '본원적 축적'이라는 토지수탈 과정이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초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토지를 우선적으로 빼앗지 않는다면 자본을 만들거나 감추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라이보이런은 공해를 수반하는 자본주의 생산의 쳇바퀴가 더 많은 토지를 계속 요구하므로, 오염과 자원 몰수가 자본주의의 필수적, 내재적 요소가 된다고 강조한다. 지구를 가로지르는 외래종 수송이 토착 동식물을 멸종시키는 침입종으로 구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화는 생태적 악화, 자원고갈, 사람 및 문화의 파괴를 동시에 결과한다.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지리적 정치주권의 회복과 상관없이 문화의 회복을 핵심으로 한다. 식민주의자는 원주민에게 열등감의 메시지를 주입하여 전통을 거부하고 자국 문화에 동화되도록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식민지 민중은 회복탄력적 특성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지 원주민의 세계관은 사람을 균형이 필요하게끔 서로 연계되어 있는 생태계의 일부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탈식민화²⁶⁾란 열등의식을 거부하고 인간과 환경

24) Ibid., pp.109-110.

25) M. Liboiron, *Pollution is Colonialism*, Duke Univ. Press, 2021, p.13.

26) 래누이(Laenui)는 탈식민화의 5단계에 대해, 첫째 문화의 재발견과 회복, 둘째 식민화/착취로부터 결과한 상실의 애도, 셋째 전통 가치를 통합하는 미래사회, 정치, 경제구조의 구상, 넷째 비전을 향한 헌신, 다섯째 구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식별한다. A. Nesmith et al., op. cit., p.114. 두 번째 단계인 식민화 결과에 대한 애도와 관련하여, 애

의 관계를 존중하는 지방적 원주민의 전통적인 존재양식 가치를 인정하는 과정이다. 탈식민성 또한 식민적 복종은 물론 식민지 민중의 마음과 몸, 토지에 대한 착취를 거부하는 데에 뿌리를 둔다.

3) 상호교차적 사회정책

사회정책은 노동정책, 분배정책, 보건정책, 주택정책, 환경정책 등과 연결되는 넓은 의미와 노동 및 분배정책을 주로 다루는 사회복지정책의 좁은 의미로 구분된다.²⁷⁾ 전자의 관점에 서 있는 니스미스 등은 사회정책이 환경정의, 기후변화, 공동체, 웰빙 등의 생태사회적 쟁점을 가로지르는 특성을 갖는다고 파악한다. 토마스(Thomas)는 광의적 사회정책의 하위부문으로 상호교차적 환경주의(Intersectional Environmentalism; 이하 IE)를 주창하는데, 이는 사람과 지구 행성 둘 다를 보전하려는 포용적 접근이라고 한다.²⁸⁾ IE는 사회적, 환경적 정의가 서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상호관계를 간과하는 환경주의란 불완전할 뿐더러 유해하다는 입장이다. 이 접근은 젠더, 종교, 인종, 연령, 신체능력 및 계급 등 인간을 억압하는 체계가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착취와 연결되어 있음을 부각시킨다. 예컨대 에코페미니즘과 겹쳐지는 환경주의는 젠더, 가부장제가 어떻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불의로 인해 주변화된 집단의 공간 창출에 주력한다.

이에 비해 후자의 좁은 의미의 사회정책 예로는 노동 및 분배 특성에 주안점을 두는 복지레짐 논의가 대표적이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은 서구의 개별 복지국가를 비교하기 위해 복지레짐을 유형화하면서, 젠더, 장애, 세대 등 여타 사회적 분화와 인종, 이민 등 초국적 쟁점을 다루지 않았다.²⁹⁾ 그가 젠더 변수를 놓치고 있는 점은 ‘여성의 부불노동에 대해 어느 정

도란 아주 작고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예우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다르 자마일, *The End of Ice*, 최재봉 옮김, 『지구를 위한 비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참조.

27) 김영모,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28) L. Thomas, *The Intersectional Environmentalist*, Voracious/Little, Brown Company, 2022.

29) G. Esping-Andersen,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도 인정하고 가치부여를 할 것인가'라는 여성주의의 비판을 촉발시켰다.³⁰⁾ 복지레짐 논의는 가내 돌봄을 둘러싸고 여성주의의 문제제기를 받았을 뿐 아니라, 관료 및 전문가의 지배가 아닌 복지 서비스에 민주적으로 참여해야 할 장애인, 아동, 노인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해 왔다.³¹⁾

반면에 광의의 사회정책 개념에 기초한 상호교차적 사회정책의 관점은 계급 외에 젠더, 인종, 장애, 세대, 생태계 등이 개별적 중요성을 가지면서 서로 결합된다고 본다. 윌리엄스(Williams)는 사회정책의 조직화 원리가 애초에 가족, 민족, 일(work)³²⁾, 그리고 최근에는 자연을 포함하는 네 영역이 서로 교차됨으로써 구성된다고 제안한다. 이들 네 개 이념형은 제도, 문화적 유산, 경로의존성, 권력관계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데, 복지국가란 각 영역이 변화의 도전을 받을 때 다른 영역과 교차하여 조직, 조건, 사회관계 등을 공고히 재해결하려는 핵심적 방식이라고 한다.

가족 영역은 돌봄, 친밀성을 대표하며, 독립적이거나 상호의존적인 (비)가족 돌봄과 친밀한 장소, 실천 등에 내재하는 다중적 사회관계에 관련된다.³³⁾ 이에 대한 논쟁에는 양육 및 동거, 남성성과 여성성, 성애(sexuality), '경멸(존경)받는 가족이 자연적인 것으로 보여지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민족 영역은 민족국가 뿐 아니라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이주 및 정착, 전쟁과 내전 등 민족성을 정의하는 체계의 형성, 조직, 조건 등에 부수하는 사회관계이다.

30) F. Williams, op. cit., p.17.

31) 윌리엄스의 네 개 사회정책 영역 중 가족과 일에 초점을 맞춰 복지레짐 접근을 비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중반 케인즈주의의 해체 차원에서 등장한 포스트포드주의는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무보수 노동으로 수행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재구조화해 사적인 것을 일로 만들었다. 즉,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대신 재생산 영역을 돌봄 서비스로 가공해 시장에 내놓도록 한 것인데, 복지레짐 담론은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멜린다 쿠퍼·캐서린 월드비, *Clinical Labor*, 한광희·박진희 옮김, 『임상노동』, 갈무리, 2022 참조.

32) 가족, 민족, 일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표상이어서 시간, 장소에 따라 그 형태와 의미가 변동된다. 이는 복지, 교육, 법률 등의 정치행위자를 통해 촉진되는 제도 정책, 정부기능 및 관행뿐 아니라 사회운동, 캠페인 등 여타 사회적 힘을 통한 시민사회 주장은 물론 물질적 조건, 권력관계, (경쟁하는) 담론, 서로 다른 사회문화 규범, 신념 및 실천 등에 의거해 구성된다. F. Williams, op. cit., p.55.

33) Ibid., p.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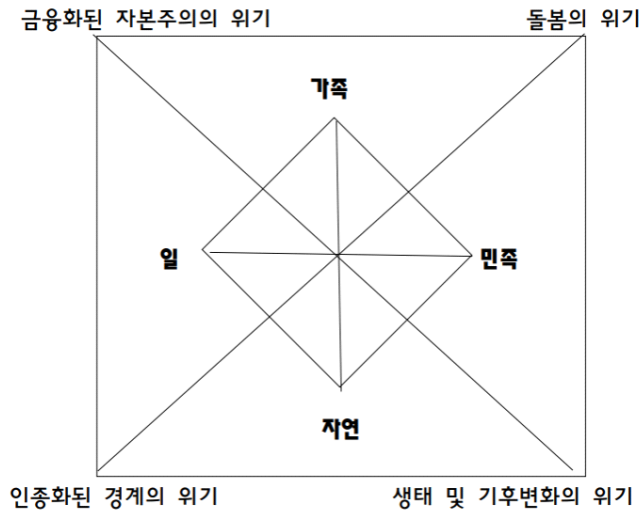
이 영역에는 우생학, 동화와 분리, 다문화주의, 이주민 배척 형태, 혐오 범죄, 구조적·제도적·일상적 인종주의, 장애 및 연령 차별을 둘러싼 배제, 주변화 및 포용의 과정 등이 공존한다.

한편 일이라는 영역이 만드는 생산조직, 사회관계의 조건 및 형태에는 자본축적, 시간·돌봄·병가 등의 노동조건, 사회보장과 상품화, 지불·부불 노동, 핵심·임시 노동간의 구별, 교육·훈련·숙련의 과정, 고용계약·혈연 노동, 노예, 이주노동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과 관련된 계급, 성, 세대, 인종, 장애 등을 둘러싼 사회집단은 지불노동으로부터의 배제뿐 아니라 임금소득에 부착되는 급여로부터의 배제에 저항하기 위해 동원된다. 끝으로 자연 영역은 인간과 비인간 생명세계 및 생물유기체 간에 새로이 발생하는 권력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또 가족, 민족, 일과 상호 교차하는 자연의 과정은 토지 및 자원에 대한 인간의 지배, 인간에 의한 인간 배제에 관련되는 자본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가부장제 등과 긴밀히 제휴되어 있다.

3. 복합위기 양상 속 기후 및 감염병 위기의 심화

1) 돌봄, 인종 및 생태를 둘러싼 위기의 복합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는 일, 가족, 민족, 자연이라는 영역에 걸친 금융, 돌봄, 인종, 생태환경 등의 위기와 서로 얽혀 있다. 윌리엄스에 의하면, 상호교차적 사회정책과 이들 복합위기 간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금융화된 자본주의 위기는 임금과 생산물의 가치 절하로 인해 신용, 저당 등의 대출을 통해 삶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파탄 상황을 가리킨다. 또 돌봄의 위기는 노동력을 사회화시켜 생산에 충원하는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자연적 성향으로 분리되거나 가치절하 당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부불돌봄은 경제를 위한 불가결한 투자이지만 국가 계정에서는 가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며, 지불돌봄 또한 저임금, 비숙련 노동이라고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돌봄은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계급화, 인종화, 세대간 불평등 등이 겹쳐 있는 가부장제 권력관계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³⁴⁾



〈그림 1〉 사회정책의 상호교차 영역과 복합위기 간 관계

한편 인종화된 경계의 위기는 전쟁, 인종갈등, 경제 붕괴, 환경재난에 따른 이출 및 지정학적 불평등에 대한 것이다. 이주민을 위협, 불법성, 갈등, 테러리즘과 결부시키는 시각은 민족국가의 강제적 국경통제, 억류, 국외추방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이민자의 불법화나 난민 위기에 찬성하는 것은 이동을 비자연적 상태로 보는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편견이다.³⁵⁾ 제국주의로부터 지구 자본주의에 이르는 식민화 과정의 자연에 대한 착취 관계를 고려할 때, 착취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세는 ‘인종적 자본세(racial capitalocene)’에 다름 아니다.

생태 변동은 인구 및 지역을 가로질러 세대 간에 걸친 공평성, 평등 및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석유를 대체하는 생물연료 생산은 주변화되는 농토에 대한 경쟁을 격화하게 만들고 원주민 여성의 생계를 위협한다. 1990 년대에 최초로 환경정의운동을 촉발한 환경인종주의는 유색 인종이 유독성

34) Ibid., pp.42-44.

35) Ibid., pp.46-51.

폐기물 근처에 살거나 깨끗한 공기와 물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폭로해 왔다. 그 일환으로 앤서니(Anthony)는 젠트리피케이션, 축출 및 소수민족 공동체에 타격을 가하는 물, 폐기물 등의 탈규제 방식이 인간과 지구 둘 다의 식민화에서 비롯됨을 논증함으로써 인종적, 환경적 불의가 어떻게 병존하는지 보여준다.³⁶⁾

금융, 돌봄, 인종, 생태 등을 둘러싼 위기는 어떻게 복합화되고 있는가? 이들 위기의 공통점은 미래세대의 연대를 위협에 빠뜨리고, 가부장제적, 인종적, 생태사회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와 그 결과인 (재)생산, 소비, 축적, 상품화 및 성장의 방식에 도전한다는 데 있다. 금융위기는 노동불안정성과 사회지출을 엄격하게 삭감시켜, 돌봄육구 및 돌봄서비스 노동에 가장 많이 관계하는 여성을 집중 타격한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돌봄 서비스의 노동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더욱 의존하면서 그들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 특히 지구적 금융위기의 동인인 부채는 선진국에서 주택소유 접근을 제한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농민의 토지가 에너지 신산업에 잠식되도록 만든다.³⁷⁾

2) 기후변화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

건강, 질병, 출생, 죽음 등은 모든 단일한 생명체에게 행성 중 하나인 지구 위에서의 존재의 체현된 진실을 구성한다. 사람과 다른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발생하는 사회적, 생물리적, 생태적 맥락에 의존하며 동시에 그것을 형성한다. 사람의 경우 건강 불평등을 포함하는 인구 건강의 패턴은 모든 인구와 행성인 지구가 어떻게 적절한가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이다. 기후변화는 생태사회적 위험의 범위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2022년 현재 지구행성의 북반구 또한 폭염, 산불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나 남반구의 경우 빈곤, 농토 상실 및 주민의 건강 악화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³⁸⁾

36) Ibid., p.45.

37) Ibid., pp.51-53.

38) 물론 기후변화와 사회적 취약성 간 연계는 부유한 나라에서도 뚜렷하다. 복지체제 아래 새로운 사회 문제 및 압력에 대응할 역량을 지닌 선진국들도 멀지 않아 지구 스케일에서

기후영향의 지배적, 직접적 효과는 지리적 불공평성을 더욱 크게 만든다. 빈곤국의 홍수나 사막화와 같은 재난은 돌봄 및 생계 책임 모두를 악화시킴으로써 여성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다. 더욱이 이동이 점점 제한되는 세계 속에서도 기후위기에 따라 기후난민이 속출하는데, 예컨대 남아시아에서는 해수면 상승 및 태풍으로 수백만명이 고향을 떠났다. 그 밖에 기후위기의 간접적 효과는 사회적 압력과 불평등을 변동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경감의 조치는 에너지 안전, 깨끗한 대기, 건강영향, 고용창출 등과 같은 잠재적 공통편익을 낳는 반면, 사회적 비용의 불균등한 분포로 말미암아 불안정무산계급(precariat)의 웰빙을 훨씬 저하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대표한다. 감염병 위기는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한 위험에 맞추어 설계된 복지국가의 기초에 도전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라 영구병자가 점점 더 많이 늙게 되면 부가적 위험이 발생하는데, 인간이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고대 병원균의 방출도 그 중 하나이다. 더욱이 경제의 지구화와 세계인구 68%가 거주하는 도시의 고밀도화는 전염병의 온상이 되어 왔다. 또한 전쟁이나 전염병 등의 대규모 재난은 사회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예컨대 2차 대전의 상황이 복지국가 건설을 가능케 했고 스페인 독감은 사회의학에 대한 근대적 관념을 형성하게 만들었다.³⁹⁾

감염병 대유행은 방역은 물론 인권 및 생태계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현존하는 불평등을 더욱 복잡화시킨다.⁴⁰⁾ 코로나19는 계급이나 국

의 환경변동과 기후위기가 불려올 일련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리라 예상된다. H. Johansson et al., "Climate Change and the Welfare State", M. Koch et al.(eds.), *Sustainabilit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Taylor and Francis Group, 2016, pp.94-108 참조.

39) 주윤정, 「코로나 시대의 생태적 전환과 실천들」, 인간-동물 연구 네트워크, 『관계와 경계-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동물』, 포도밭, 2021, 239쪽.

40) 한국경제연구원의 '코로나19가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은 한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의 직장유지율 하락이 중위소득 50% 미만 하위층의 경우 8.4%로 가장 컸고 중위소득 50-150%인 중위층은 3.2%, 중위소득 150% 초과 고소득층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성별 직장유지율은 남성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3.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에 상관없이 노인 및 육체적 취약집단의 사망률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불이익집단, 인종적 소수집단 등의 웰빙을 불비례적으로 악화시켜 왔다. 특히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봉쇄령(lockdown)으로 인한 노동자 임금 및 기업 손실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공적 차입을 증가해 왔다. 신종 감염병은 돌봄 시장의 약점과 돌봄 이용자 및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을 모두 드러낸다. 그리고 50만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기록될 즈음,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도 덩달아 늘어났다.⁴¹⁾ 지속되는 경찰의 야만성과 폭력, 체계적 인종주의와 불평등 등에 분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대유행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은 그들의 집을 떠났다.

감염병 위기에 대한 사회정책의 해법은 그것이 기존 사회적 위험과 다른 성질의 것이면서도 그것과 착종되어 있음을 분별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식민주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인수공통 감염병의 잦은 대유행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총체적 불평등뿐 아니라 그것과 건강 돌봄, 환경악화 간 연계를 고려하는 새로운 복지 체제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취약한 공적 돌봄과 인종주의의 폐해는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잠시 멈추고 삶 자체를 위협하는 지구적 위기를 자각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이 멈춤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본주의, 식민주의 체제의 모순에 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

나아가 주목할 만한 것은 감염병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위기는 새로운 형태의 이웃, 지방공동체 간 연계망과 시민사회 조직 간 상호성이 움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돌봄 및 건강 관계자 등 핵심 작업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봉쇄령에 따라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급감함으로써 깨끗한 공기와 녹지공간이 재평가되고 있다. 민족주의나 불평등을 불식하는 지구적 협력 및 지도력에 대한 욕구 또한 점증해 왔다.⁴²⁾

다. 『한겨레신문』, 2022.8.4. 참조.

41) Ande A. Nesmith et al., op. cit., p.105.

42) 미국과 한국은 코로나19가 같은 날 최초로 발생되었지만, 이후 상황은 대조적이었다. 이는 지도력, 문화, 제도 등의 차이로 설명되는데,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건강, 생명보다 경제를 보호하는 데 더 큰 관심을 표출했다(Ande A. Nesmith et al., op. cit., p.119).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대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동체 책임이 결합되어 집합적,

코로나19는 계급, 지역, 직업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젠더, 인종, 민족, 연령, 장애라는 탈식민적 쟁점이 현실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정책의 전환 계기를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은 생태위기의 일환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남북문제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북반구 선진국에 의한 탄소 배출이 남반구 빈곤국에 더욱 큰 피해를 남기는 데 반해, 후자는 부유한 나라의 웰빙도 마찬가지로 타격하는 식민주의의 부메랑을 뚜렷이 보여준다. 돌봄 및 인종의 위기와 착종된 감염병 위험에 직면하여 모든 지구인들은 자본주의의 경쟁적 개인주의에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많은 활동가와 사상은 감염병이 창궐하는 지금이 서식하기를 원하는 종류의 세계를 접합할 적당한 때임을 주장한다. 대중적 슬로건이 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은 미국으로부터 유럽에까지 확산되어 온 ‘흑인 삶이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저항에 의해 근본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⁴³⁾

에콰도르 원주민의 ‘부엔 비비르(Buen Vivir)’ 운동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공간과 시간을 단일한 스펙트럼에 위치시킨다. 비슷한 흐름에서 탈식민 사회정책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임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재분배를 추구한다. 윌리엄스는 탈식민성의 핵심인 인간-인간 간, 인간-자연 간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⁴⁴⁾ 첫째 상호의존 관계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 및 생명유기체의 생태계 간에 적용된다. 둘째 상호의존은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 권리뿐 아니라 이 행성을 이어받을 미래세대에 대한 세대 간 의무를 강조한다. 셋째 그것은 물질적, 도덕적 배상을 받아야 할 탈인간화된 인종적 고통에도 관련된다.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돌봄 윤리,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 등으로 해석된다.

43) F. Williams, op. cit., p.173.

44) Ibid., p.188.

4. 탈식민 사회정책을 통한 생태복지체제로의 전환

1) 탈식민 사회정책과 행성적 제4의 길

생태사회적 배제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의 여러 영역을 ‘생태사회적인 것’으로 재구조(再鑄造)하려는 취지의 신조어이다.⁴⁵⁾ 이는 식민화에 따라 지구 곳곳에서 외래종 수송으로 토착 동식물이 멸종됨과 동시에 사회적 배제집단의 문화 또한 말살되어 왔음을 부각시킨다. 식민주의가 여성, 미래세대, 장애인, 이주 난민, 비인간 생명체 등에게 웰빙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3장에서 다룬 탈식민성과 상호교차적 사회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다. 즉 탈식민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계급에 근거한 노동 및 분배에 대한 관심을 성, 인종, 연령, 신체능력, 생태환경 등 탈식민적 쟁점과 접합하여 생태복지체제로 전환하는 다양한 경로를 준비하게 만들 수 있다.

빈곤여성 및 장애인 등과 아울러 유색인종 또한 비인간 생명세계와 ‘밀접’한 것으로 인지되는 경향에 의거하여, 자연은 오랫동안 인종위계 담론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다. 또 시장의 혁신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시장환경주의, 더 많은 규제와 조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지속가능 자본주의 등은 지구라는 행성의 자원 규모를 초과하는 진보, 이윤, 생산, 성장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부추긴다.⁴⁶⁾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녹색기술이나 돌봄시장은 역동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이라 포장되나, 단기적 관점에 치우쳐 현존하는 불평등이나 분배적 불균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탈식민 사회정책의 접근은 기후 및 감염병 위기가 시장 자본주의, 돌봄 및 인종의 위기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주목하여, 자연은 물론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 아동 및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합위기에 대응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요컨대 감염병 위험을 비롯한 현대의 복합위기에 근본적으로 맞서는 탈식민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원주민, 여성, 장애인, 미래세대, 이주 난민 등의 권리를 인정한다. 둘째 원초적

45) 한상진, 앞의 책, 90-91쪽.

46) F. Williams, op. cit., p.219.

경관의 서식지와 토지, 물 등이 연계되어 보전되도록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셋째 일, 가족, 민족, 자연의 교차영역에서 발생해온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인간, 인간-자연 간 연대에 주목한다. 넷째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불의에 맞서 돌봄, 인종차별 반대, 비인간 생명체 등의 가치를 승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뿐인 지구에서 다른 세계가 가능할까? 니스미스 외의 짧은 대답은 “그렇다”이다.⁴⁷⁾ 하지만 좀 더 길게 대답하려면, 현 상황이 위기이며 그 해결책은 인간이 자연 및 다른 인간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의 전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금융, 돌봄, 인종화된 경계, 생태환경 등을 둘러싼 복합위기가 탈식민 사회정책을 필요로 하므로, 서구적 의미의 복지가 행성적 차원의 웰빙으로 확대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따라서 식민주의가 생태, 사회 및 인간에 미쳐 온 영향을 천착하여, 생태복지체제의 전환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근거한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간 호혜적 프로그램들을 궁리해야 할 것이다.

이제 행성적 제4의 길을 전망하기 위해, 윌리엄스가 제안한 사회정책의 네 개 영역을 중심으로 제1의 길부터 제3의 길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평가해보자. 먼저 제1의 길은 민족 영역과 관련되며, 비서구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바탕으로 한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제1섹터(정부) 주도 복지국가 노선이다. 그리고 제2의 길은 가족 영역과 관련되는데, 신자유주의적 제2섹터(기업) 역할과 아울러 여성의 가내 부불돌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편 20세기 말에 대두한 제3의 길이란 일 영역을 중심으로 제3섹터(지역사회 비영리조직)와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둔다. 필자는 제4의 길을 자연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전적 변화에 대응하는 제4섹터(제1, 제2, 제3의 섹터에 포괄되는 않는 잔여적 섹터로서의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미래세대, 노인, 비인간생명체 등 생태사회적 불이익집단)의 정책 및 실천 연대로 파악한다.

그렇다면 제4의 길은 왜 행성적 스케일에 의거하는가? 한상진 외⁴⁸⁾는 지

47) Ande A. Nesmith et al., op. cit., p.108.

48) S. Hahn and A. McCabe, “Welfare-to-Work and the Emerging Third Sector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15, No.4, 2006, pp.314-320.

구적 제3의 길을 서구 경험에 기초한 ‘복지에서 노동으로’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대신, 비서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3섹터 주도의 일자리 거버넌스로 설정했다. 필자는 제4의 길을 민족, 가족, 일의 영역과 교차하면서도 자연의 위기에 초점을 두는 탈식민화 사회정책의 경로로 정의하므로, 생태사회적 웰빙의 감시자이자 주체가 활동하는 스케일은 지구보다는 행성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행성적 제4의 길이 식민주의의 피해자를 집합적 주체로 부각시킨다고 해서, 정부, 기업, 제3섹터 등과 적대적으로 투쟁하는 대립 노선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후 및 감염병 위기의 재난적 성격은 식민주의의 피해 집단이 서로 협동하는 것과 함께, 정책 및 경제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정부와 기업의 해결 노력도 긴급하게 요청한다. 2022년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재등장은 기후정의, 탈핵 등을 둘러싸고 제3섹터의 저항을 활성화시키겠지만, 정부권력과 환경운동이 대치하는 동안 생태환경 파괴는 지속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상황이 못 된다. 지구적 제3의 길을 향한 ‘일을 통한 복지’에서 제1, 제2, 제3 섹터 간 협치가 요구되어 왔듯이, 제4섹터로 명명된 집단과 나머지 섹터들 역시 정부권력 및 정당정치의 생태사회적 전환, 그리고 탈식민 사회정책을 향한 공생적 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생태복지국가에서 생태복지체제로

복지국가는 항상 국가나 복지 이상의 것이다.⁴⁹⁾ 국가, 복지에 부착된 의미와 조건은 시공간에 따라 변동한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의 원천으로 공동체, 이웃, 가족, 친구, 작업장, 인터넷, 자조적 상호부조 집단 및 지구, 국가, 지방 스케일의 공적, 사적, 자원적(自願的) 공급에 의지한다. 복지국가는 일, 가족, 민족을 재구성하고 다른 한편 그것에 의해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림 1>의 일-가족-민족 간 역동적 관계 속에서 존재해 왔다. 그런데 필자는 자연 영역의 부상에 따라 민족국가보다 지구, 지방의 스케일 정치가 더 활발해지고 있어, 복지국가 범주가 지방, 국가, 지구

49) F. Williams, op. cit., p.219.

스케일을 넘나드는 복지체제로 다시 프레이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태수 외는 녹색복지국가를 복지국가론의 기본 관점에 입각해 녹색의 담론을 포섭하는 접근으로 규정한다.⁵⁰⁾ 즉 복지국가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웰빙에 필수적인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가치와 사회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 때 녹색복지국가는 인간의 생존을 존중하면서 자연과의 상생 관계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생태적 가치, 즉 생명가치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복지체제로 정의된다. 이러한 녹색복지국가론은 맺음말에서 검토할 생태복지국가론과 거의 비슷한 한국 복지국가의 생태개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강수택은 생태연대주의 관점에서 생태복지국가의 생태복지 체제로의 스케일 확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조언한다.⁵¹⁾ 그는 기존의 복지국가론이 국민국가 단위의 사회적 연대를, 생태복지국가론의 경우 글로벌 연대를 추구한다고 차별화하고 있다. 생태위기로 인한 위험이 초국적 성격을 지니므로, 사회적, 생태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생태복지의 목표는 국제적 연대를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생태복지국가는 생태적 위험의 예방과 사후 대책을 위해 지역 단위의 로컬 연대를 강조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를 떠받쳐 온 사회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의 산물로 생겨났다는 점에서 탈성장(degrowth)에 친화적인 '생태'라는 접두사가 붙은 생태복지국가론이나 생태복지체제의 담론은 모순적 설정이라 할 수도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는 노동-복지의 연쇄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지만, 생태복지체제는 생태적 회복력과 사회적 웰빙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전제한다. 현 단계 복지국가는 민족국가/시장의 관계라는 전통적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별개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모순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정책의 교차영역에서 탈식민화를 실행하는 생태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월리엄스의 논법을 빌려 생태복지체제를 정의하자면, 그것은 기후 및 감염병의 위기로 근본적 변화를 도전받게 된 자연을 일, 가족, 민족의 영역과

50) 이태수 외,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헤이북스, 2022, 194-223쪽.

51) 강수택, 『환경과 연대』, 이학사, 2022, 278-280쪽.

교차시켜 다중스케일(multi-scale)의 생태사회적 포용(ecosocial inclusion)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책 및 실천 거버넌스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자연과 일, 가족, 민족 등을 횡단하는 생태복지를 향한 체제전환에서 반드시 여성의 돌봄 위기, 이주난민의 인종화된 경계 위기, 불안정 무산계급의 금융 위기 등에 똑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생태복지체제를 복지국가의 생태개혁 수준으로 협애하게 설정하는 것보다 사회정책의 교차영역과 복합위기라는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의의는 무엇일까? 이는 생태위기에 맞서는 주체를 지구적, 국가적, 지방적 스케일 모두에서 미래세대, 비인간생명체 뿐 아니라 계급, 성, 장애, 인종 등에 걸쳐 형성하려는 급진적 기획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생태복지체제의 요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 민족국가 스케일에서는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생태개혁이 중요한데, 각각의 사례로는 애완동물의 건강보험 대상 편입,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연금개혁, 돌봄과 환경보건 서비스의 결합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지방 스케일의 생태사회적 공동자산화(ecosocial commoning)⁵²⁾와 국가 스케일의 생태복지체제 혁신, 지구 스케일의 탈식민화를 아우르는 다중스케일 정치를 추구한다. 셋째 여성, 장애인, 미래세대, 유색인종, 비인간생명체의 이해당사자 운동을 바탕으로 각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의 윤리를 확립한다. 넷째 생태사회적 웰빙을 향한 정부, 기업, 제3섹터 및 위 이해당사자 간 공생적 협치를 지향한다.

5. 맺음말

복지국가의 생태개혁은 생태복지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맥락에서 복지국가 생태개혁을 다루

52) 생태사회적 공동자산화는 생태적 공동관리를 위한 사회적 규범 확립을 필요로 한다. 맺음말에서 다루겠지만 박승욱이 제안하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조직화도 이러한 커먼즈 거버넌스의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윌리엄스는 생태민주주의의 기획에 토지의 재생과 지방적 이용, 유틸리티와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접근, 참여예산제, 채굴주의에 대한 저항 등을 포함시킨다. F. Williams, op. cit., p.181.

는 논자로는 남재욱, 강경숙⁵³⁾, 박승옥 등이 있다. 우선 남재욱은 기후불평 등에 대처하는 복지국가의 과제를 주거복지, 지역간 불평등, 노동전환 등에서 찾는다.⁵⁴⁾ 이 가운데 주거복지는 에너지 빈곤층의 냉난방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지역간 불평등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로 타격을 받는 농촌 및 농업 대책을, 노동전환은 고탄소 산업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으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에 대해 석탄, 석유 등 기존 화석연료가 아닌 블랙펠릿(black pallet)⁵⁵⁾이라는 재생에너지 숲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요청된다.

한편 강경숙은 식량, 주거, 성 평등, 사회적 공평, 정치적 발언권, 평화와 정의, 소득과 일자리, 건강 등 '사회적 기초'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생태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정의와 결합하고, 탄소예산 및 배출 제로 논의와의 접점이 넓어지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고용보장 요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녀는 산업과 직종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심화되어 탄소중립의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박승옥에 의하면, 한국에서 노동, 농민 등의 시민사회단체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어 왔으며 여성, 청년, 장애인, 소수자, 보건복지 등 부문별 사회운동 또한 각개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다.⁵⁶⁾ 진보정당을 비롯한 지역주민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 역시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을 향한 정치력이 미약하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그는 느슨하게 분절된 사회운동 상황이 역으로 기후정치의 세력화를 강하게 추동할 수 있는 핵심 동인이 되리라 낙관하

53) 강경숙, 「기후정의,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2 (http://www.welfarestate21.net/home/data3.php?mode=read&mod_gno=2676, 검색일: 2022.7.11.).

54) 『울산저널』, 2022.7.4.

55) 블랙펠릿은 잔가지, 쓰러진 나무, 제재소 톱밥 등의 산림바이오매스나 수숫대, 왕겨 등 농산부산물로 만들어진 반탄화(半炭化) 숲이다. 조옥래, 「석탄 연탄의 세대교체」, 미발표 파워포인트 자료, 2022.

56) 『프레시안』, 2022.7.25.

면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조직화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세 논자들의 주장은 노동운동의 중심성이나 지방 스케일에서의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탈식민 사회정책의 요체인 장애인, 여성, 유색인종, 근로빈곤층, 비인간 생명체 간 연대의 근거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이 글의 결론적 초점은 생태복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 및 감염병 위기와 금융, 돌봄, 인종화된 경계의 위기를 교차시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및 실천행동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논자들이 제안하는 민족국가 스케일의 생태복지체제는 다음의 과제들과 연계된다면 다중스케일에 걸친 제4섹터 주도의 생태사회적 통합으로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먼저 김도균이 제기한 한국형 ‘자산기반 복지’ 체제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광풍 가운데 더욱 강화되고 있다.⁵⁷⁾ 다양한 매개를 통해야겠지만 이러한 시장 중심의 자산기반 복지는 커먼즈의 상상력으로 공동자산화의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지역사회 돌봄체계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이 코로나 19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돌봄체제가 어떻게 감염병에 대처해 나가는지 예의 주시해야 하겠다. 한편 조선업 등에서의 국내인력 부족 상황 속에서 필연적인 이주노동자 유입은 중국 혐오, 아프간 난민 차별 등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인종주의 연대를 형성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태수 외⁵⁸⁾가 적절히 검토하고 있듯이, 생태복지체제로의 전환에 소요될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탄소세 신설 등 조세체계의 개편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기후 및 감염병 위기에 맞서기 위해, 민족국가 스케일의 생태복지국가 논의를 확장하여 탈식민 사회정책 접근에 의거하는 생태복지체제의 다중스케일 정치가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은 지구의 남북반구에 걸쳐 인간/비인간생명체의 공존을 위한 생태사회적 웰빙의 연대를 가시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생태복지체제의

57)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58) 이태수 외, 앞의 책, 342쪽.

탈식민성은 기후변화에 따라 계속 빈발할 집중호우에 대처하여 발달장애인, 여성 감정노동자, 노인, 빈곤아동 등의 웰빙을 보장할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더욱이 이는 비인간생명체의 웰빙을 보전하는 서식공간의 확보가 기후 및 감염병 위기를 경감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울산저널』, 『프레스시안』, 『한겨레신문』

2. 논저

강수택, 『환경과 연대』, 이학사, 2022.

고쉬, 아미타브, *The Great Derangement*, 김홍옥 옮김, 『대혼란의 시대』, 에코리브르, 2021.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김영모,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박순열, 「기후변화가 아닌 체계의 변화,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자유공동체 1회 공개포럼, 『기후위기 시대, 체제전환의 길을 묻다』, 숲과나눔재단, 2022.

이태수·이창곤·윤홍식·김진석·남기철·신진욱·반가운,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헤이북스, 2022.

자마일, 다르, *The End of Ice*, 최재봉 옮김, 『지구를 위한 비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조옥래, 「석탄 연탄의 세대교체」, 미발표 파워포인트 자료, 2022.

주윤정, 「코로나 시대의 생태적 전환과 실천들」, 인간-동물 연구 네트워크, 『관계와 경계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동물』, 포도밭, 2021.

_____,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생태환경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한국독일학회, 『아시아와 유럽의 기후생태문제 연구』,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2.

차크라바르티, 디페시, *Provincializing Europe*, 김택현·안준범 옮김,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린비, 2014.

쿠퍼, 멜린다·캐서린 월드비, *Clinical Labor*, 한광희·박진희 옮김, 『임상노동』, 갈무리, 2022.

한상진, 『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국문화사, 2018.

_____, 「먹거리 체계의 생태사회적 전환을 향한 먹거리 정의의 접근」, 『에코』 제25권 제1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21.

- Esping-Andersen, G.,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Hahn, S. and A. McCabe, "Welfare-to-Work and the Emerging Third Sector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15, No.4, 2006.
- Johansson, H., J. Khan and R. Hildingsson, "Climate Change and the Welfare State", Koch, M. et al.(eds.), *Sustainabilit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Taylor and Francis Group, 2016.
- Krieger, N., *Ecosocial Theory, Embodied Truth, and the People's Health*, Oxford Univ. Press, 2021.
- Liboiron, M., *Pollution is Colonialism*, Duke University Press, 2021.
- Nesmith, Ande A. et al., *The Intersec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Climate Change, Community, and the Ecology of Life*, Cham: Springer, 2021.
- Phillips, L., *Resolving the Climate Change Crisis: The Ecological Economics of Climate Change*, Springer Netherlands, 2016.
- Thomas, L., *The Intersectional Environmentalist*, Voracious/Little, Brown Company, 2022.
- Williams, F., *Social Policy: A Critical and Intersectional Analysis*, Cambridge: Polity Press, 2021.

3. 인터넷 자료

- 강경숙, 「기후정의,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2(http://www.welfarestate21.net/home/data3.php?mode=read&mod_gno=2676, 검색일: 2022.7.11.).
- 크리스토퍼 갬블·조수아 하난·토마스 네일, "What is New Materialism?", 박준영 옮김, 「신유물론이란 무엇인가?」, 2019(<http://tigersprung.org/?p=2494>, 검색일: 2022.10.31.).

〈Abstract〉

**Transition to Ecowelfare System for the Confrontation
with Climate Crisis and Corona Virus Pandemic
- An Approach to Decolonial Social Policy -**

Hahn, Sang-Ji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of the ecosocial, decolonialization and intersectional social policy, and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crisis and Corona 19 pandemic with special respect to the main four aspects of work, family, nation and nature. Those aspects are connected with the complex crises of financial, care, racial border and ecosystem, and proposes alternative ecosocial well-being strategies based on multi-scalar politics concerning global, national and local scale.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decolonial social policy for the confrontation with the complex crises and prospects the transition to the ecowelfare system by way of new path of 'planetary fourth way' which can differentiate from 'global third way' discourses focusing the welfare-to-work. Planetary fourth way will be guided by 'fourth sector' which may comprise the working poor, the disabilities, youth, women, migrated workers and nonhumans.

* Key Words: Climate Crisis, Corona Virus Pandemic, Intersectional Social Policy, Ecwelfare, Decolonial Social Policy

· 논문투고일: 2022년 9월 30일 ·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16일 · 게재결정일: 2022년 11월 23일
